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야권, 강력 반발

25번째... 국회, 내달 세번째 재표결 야5당 탄핵연대 "탄핵 이끌어내겠다" 민주 의원들, 용산서 항의 규탄 대회 박찬대 "뻔뻔하고 기증스럽다" 성토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세 번째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했으나,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제3차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스

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권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 의원 단체인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탄핵연대는 회견문에서 "남은 것은 특검을 통해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윤 정권의 임기를 하루 빨리 끝내는 것 뿐"이라며 "대통령이 스스로 해결할 생각이 없으니 국회가 나서서 국정농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은 도도한 흐름

이 됐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심의 파도를 피할 수 있는 정권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특검은 대통령이 국민의 불신을 피할 유일한 탈출구였다"며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걷어찼으니 이제 남은 것은 국민에 의한 파면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특검 재표결 전

략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8명이 (특검 찬성으로) 오면 된다는 숫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연대 소속 야5당 의원은 47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규탄 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뻔뻔하고 기증스럽다"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내달 초순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 중 8석이 이탈할 경우 가결될 수 있다.

지난 2월 첫번째 재표결에서는 재석 281인 중 가 171표, 부 109표로 부결됐다.

10월 두번째 재표결에서는 가 194표, 부 104표로 부결돼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시 추경안 확정... 광주FC 운영비 삭감

시의회 예결위, 7조8천억 규모 의결

광주시의회가 지급 중단 위기에 놓였던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살리고 광주FC 운영비는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4년 2차 광주시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26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광주시가 제출한 추경 대비 1.1% 증가한 7조8617억원을 최종 의결했다. 세입 예산은 64억700만원을 증액하고 30억5000만원을 감액했다.

세출 예산은 소방 특별회계 전출금 19억8500만원 등 97억6500만원(17건)을 증액하고 난자동결기술비 지원과 중증 뇌병변 장애인 낮 활동 지원 등 79억4700만원(10건)을 삭감했다.

또 '선 지출 후 사후 보전' 문제로 불어졌던 광주FC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 지원금 10억69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광주FC는 이미 54억원의 대출 채무를 안고 있어 자본 잠식 상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프로축구연맹의 재정 건전화 제도에 따라 오는 2030년 1군 무대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 진압 차량 구매를 위해 세웠던 예산 19억8500만원의 경우 행안부에서 삭감되면서 인건비로 우선 집행했으나 광주시가 상생카드 발행 비용을 활용해 충당했다.

시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임미란 시의원 "학생독립운동 발굴·개발 강화해야"

광주시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한 자료 발굴 및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임미란(사진) 광주시의원은 26일 열린 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올해 시교육청이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한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았다"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소장 자료가 적어 역사를 제대로 조명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이 단순 체험 프로그램에 치중돼 있다"며 "자료 수집, 연구 등 체계화로 기념관이 '독립운동 교육의 총본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 마용주尹에 제청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대법관 최종 후보로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임기 만료를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마용주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

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노동약자 지원 '기밀언덕법' 당론 추진

국회서 입법 발의 국민보고회

국민의힘은 26일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자·플랫폼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밀언덕법'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은 일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세력이 아니라, 노동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최근 들어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와 같은 형태의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라며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은) 노조라는 울타리도 없고 법적 울타리도 미비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기밀 곳 없는 형편"이라며 "오늘 국민 보고회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 약자들이 기밀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노동분야 격차해소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우리 노동법 체계로는 이분들이 겪는 고초를 해결하거나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변화의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당과 합심해서 국민들께 (기밀언덕법)을 널

리 알리고 야당 의원들께도 적극 설명드려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과 사업을 확대 개편해서 노동 현장을 따뜻하게 만들도록 특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기밀언덕법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자·플랫폼 종사자 등 직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원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법안은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소수미지급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향후 당내 노동전환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 시대

내달 27일부터 신청

오는 12월27일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및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원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1968년 11월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약 56년 만에 실물 형태를 벗어나는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 코드를 촬영한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폰을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직접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접속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휴대폰을 바꿨던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

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내년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 받는 2008년생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도록 했다.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세종, 강원 홍천, 경기 고양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개월 간 시범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